

단오절 연휴 길림성 사회치안질서 량호

- ◆ 형사·치안 단속 건수 동기 대비 각기 42.18%, 16.16% 감소
- ◆ 대형 행사 안전 진행 , 도로교통 질서정연



장백산풍경구에서 치안 유지에 나선 경찰들

단오절 연휴 기간, 전 성 공안 기관은 공안부와 성당위, 성정부의 포치 요구를 관철 실시하여 치안 유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전하고 조화로운 명절 분위기를 전역 조성하였다. 연휴 기간 전 성 형사, 치안 상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기 42.18%와 16.16% 감소하고 대형 행사와 풍경구 운영이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도로교통이 질서정연하고 전반 사회 국면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었다.

연휴 기간, 전 성 공안기관은 매일 2만 7,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사회안정을 강화했다. 면회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공안과 무장경찰의 단합기제와 폐속반응기제를 엄격히 실행하여 변화한 상권, 공항역 등 중점지역과 인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전개해 경찰 감시력과 단속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했다. 전 성 공안교통 경찰부문은 안전우한 조사, 도로 질서 유지, 고봉 순찰통제, 출혈 선전제시 등 안전보장과 도로 원활 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행했다. 하루 평균 6,000 명의 경찰력과 1,500 여대의 경찰차를 동원하고

1,223 개의 집법소와 름시집법소를 가동해 음주운전, 과대적재 등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전 성 도로교통 안전 장벽을 든든히 구축했다. 전 성 공안파출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음식점, 노래방, 호텔 등 '9개 작은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 우한 조사와 단속 강도를 강화하고 문제 정돈을 추진해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단오절 당일, 장춘시, 길림시, 대안시에서는 각기 룡주경기가 펼쳐졌는데 출전 선수들과 관객들의 안전을 수호하고자 현지 공안기관은 앞당겨 안보사업 방안을 내오고 경력을 추가 파견하여 현장 질서 유지와 도로 원활 유지 등 안보사업에 나섰다. 경찰용 무인기를 리용해 공중 순찰통제를 함으로써 지상 근무 경찰과 함께 경기장 주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순찰을 진행하고 빈틈없는 안전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룡주경기의 안보에 전력을 다하였다.

/리전기자

/사진 길림성

공안청



공직자 출장 기간 휴일에 자비로 현지 여행 , 규률 위반인가?

“출장 기간 휴일에 자비로 현지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이 규률 위반에 속하는가?”

이 문제는 당원간부와 공직자들이 흔히 부딪치는 보편적인 문제로서 여러 사람들의 구체적인 리익에 관계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견과 오해를 야기하기 쉽다.

규률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정리하고 부당한 상황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공적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어떤 공직자들은 출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기회를 틈타 관광하려는 동기가 뚜렷한바 앞당겨 출장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연기하여 돌아오는 방법으로 자비로 여행한다. 예를 들면 일부터 공무출장 일정을 금요일로 배치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비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무출장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광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만약 공으로 사리를 채우고 의도적이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규률 위반에 해당된다.

둘째, 사적인 일로 공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보

아야 한다. 어떤 공직자들은 공무 일정을 압축하거나 개편해가면서 관광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록 자비 관광으로 공금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활동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준다. 이는 분명히 규률 위반에 해당되는바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셋째, 사적인 일에 사용한 비용을 공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어떤 공직자들은 비록 관광지 입장권 등 놀이 비용을 결산하지는 않지만 여행 기간의 식사, 숙박, 출장보조 등 비용을 결산하는데 이는 분명히 규률 위반에 해당된다.

공무출장 기간에 정상적인 공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휴식시간을 리용해 지도자의 동의를 받고 자비로 현지의 관광지를 참관하여 아무런 불량한 영향도 끼치지 않은 이런 상황은 규률 위반 행위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쉽게 헷갈리는 부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데 규률 위반은 흔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시선에 직면하여 언제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명석함을 유지해야 한다.

/신화사

연길 70 대 로인

주는 스마트폰 자료 삭제했다가 권리침해로 고소당해

연길의 한 70 대 로인은 우연하게 스마트폰을 주는 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던 영상자료들을 삭제했다가 '법원놀음'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외지 관광객 장씨는 연길에 놀러왔다가 부주의로 그만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는데 후에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던 자료가 전부 삭제된 것을 발견한 장씨는 스마트폰을 주는 70 대의 로인을 법원에 기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이 권리침해 책임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촬영에호가인 장씨는 늘 전국 각지를 다니며 스마트폰으로 희귀 야

생동식물, 금수강산 영상을 촬영했다. 지난해 10 월, 장씨는 연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게 되었다. 그후 분실한 스마트폰에 여러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도 응답이 없자 연길 공안기관을 찾아 신고한 후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갔다. 공안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스마트폰이 70 대 로인에게서 발견되었고 장씨에게 반송되었다. 하지만 장씨가 검사해보니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던 진귀한 영상자료가 모두 삭제되었고 워렛 연락처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알고보니 로인이 스마트폰을 주는 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지웠던 것이다.

이번 사건의 담당 법관은 장씨의 스마트폰에 있던 수천개의 영상자료가 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0 대 로인은 자신은 우연히 휴대전화를 주었을 뿐이고 “자료를 삭제한 것은 주는 물건을 더 유용하게 쓰려는 목적에서였다.”며 “삭제된 자료가 스마트폰 주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일부 책임을 지고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담당 법관은 쌍방의 주장을 료해한 후 쌍방에 대한 조정을 했다.

결국 장씨는 마음속 매듭이 풀렸고 령정 지체 및 우송으로 인한 비용 배상만 받았다. 그는 로인이 배상하겠

다고 제기해온 액수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으며 로인이 이제해온 돈을 받은 후 기소를 철회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남이 분실한 물건을 찾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는 재물을 될수록 빨리 분실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의무이기도 하다. 물건을 주는 자는 잘 보관했다가 제때에 분실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질 경우 주는 자는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유경봉기자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서 환전 활동에 종사하는 중국류학생,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국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특히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외환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많은 중국류학생을 비롯한 화교들 역시 점차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주거나 현금을 인출해주거나 자신의 은행카드를 빌려주거나 환차익을 노리고 거래에 개입하는 행위조차도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요행심리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일이 터지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해외는 정말 법의 사각지대일까? 특히 해외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하거나 불법 자금의 흐름을 도운 경우 중국으로 도파하면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필자 역시 한국의 변호사사무소에

서 10 여년간 풍부한 실무 연수와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한국에서 정치법학 박사과정 재학중인 중국류학생으로 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다. 중국류학생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소한 리익을 쫓다가 큰 것을 잃고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캠퍼스에서 교도소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제 45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외환을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변칙적으로 외환을 사고팔거나 외환을 되팔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중개하여 거래금액이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은 위반자에게 경고와 주교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반 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30% 이상, 해당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2023 년 12 월 27 일, 중국 최고인민

검찰원과 국가외환국은 외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위법 사례 8 건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특히 국경간 ‘맞고 환형’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로 조모씨 등 일행은 2019 년 3 월부터 4 월까지 아랍추장국련방과 중국에서 외화를 인민페로, 또는 그 반대로 교환 및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환거래를 벌였다. 이들이 취급한 환전 금액은 총 4,385 만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총 87 만원의 리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절강성 항주시 서호구인민법원은 2022 년 3 월 24 일, 조모씨에게 불법 경영죄를 적용하여 유기징역 7 년 및 벌금 230 만원을 선고했다. 조모씨 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9 월 5 일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항소 요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불법 환전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

다. 설령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이나 리익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불법 소득 몰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

한국에 있는 중국류학생이 중국에서 인민페를 수취하고 한국에서 환화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환화를 수취하고 중국에서 인민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한다.

불법 외환거래 행위는 한국에 있는 기간에 발생했든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드러났든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해외는 결코 법의 밖이 아니며 일단 법의 금지선을 넘는 순간 가벼우면 벌금, 무거운면 구속과 함께 인생에 큰 ‘홀집’이 생긴다. 한국에 있는 모든 중국류학생들이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어렵게 얻은 류학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순간의 요행심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리현 (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길림성 공안기관 , 수험생 자격증 ‘록색통로’ 개설



과 차례를 나눠 자격증 발급 방문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할구역내 고중, 대학 입시 시험장 개설 상황에 결부해 름시 봉사점을 설치하고 경찰들을 조직하여 시험장 봉사소에 입입해 주민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수험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름시 신분증 발급 봉사를 제공하며 수험생들의 자격증 수속과 신분증, 자격증 사용 응급봉사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속자료 간소화를 실시하여 타지역 주민신분증 신청자의 경우 현지 취학, 거주 증명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공안기관에서 수속 인원의 신분을 비준한 후 발급하고 있다. 름시 주민등록증 수속을 신청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접수’, ‘현장에서 발급’, ‘현장에서 수령’하는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여 수험생의 신분증 사용 요구를 만족시킨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자

격증 ‘록색통로’ 편민봉사 활동에 대한 고중,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료해를 제고하고 광범한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대학입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저 성공안청은 주동적으로 언론매체들과 손잡고 미니블로그, 위챗, 틱톡, 콰이서우 등 온라인 플랫폼을 리용해 수험생들을 위한 봉사를 다형식, 다각도로 널리 홍보했다.

/리전기자